

급증하는 스토킹 범죄, 앞으로 전자발찌 채운다

광주 올 상반기에만 285건 전년동기보다 3배 이상 늘어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 높아 법무부, 최장 10년 부착 추진

광주에 사는 6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12일 법원에서 판결문을 전달받았다. 판사는 A씨에게 피해자 B씨(여)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9월 11일까지 피해자 집, 직장, 그 밖에 B씨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앞서 검사는 경찰의 신청을 받아 수사와 재판을 거치기 전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사에 청구했다. 경찰의 초동 수사 결과, A씨가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지난 3월부터 7월 말까지 폭행·육설·난폭운전·협박 등을 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고 더 큰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A씨 사례처럼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는 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그동안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내렸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법률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1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7일까지로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통과 등을 거쳐 연내 법안이 제출되는 예정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검사는 스토킹범죄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스토킹범죄자에 대해서도 출소 후 최장 10년, 집행유예 선고 시 최장 5년 범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피해자 등 특정인에 접근금지 명령을 반드시 부과

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범죄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과 함께 더욱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이래 적용 대상 범죄 범위를 넓혀갔다. 법 제정 당시에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성폭력범죄자들만을 전자장치 부착 대상으로 삼았으나, 수차례 개정을 거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살인범죄자, 강도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의 부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최장 기간 또한 최초 5년에서 10년으로, 10년에서 30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늘어났다. 대상 유형도 다양화돼, 모든 가석방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됐고 보석의 조건으로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제는 스토킹범죄에까지 적용을 확대한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스토킹범죄는 광주에서도 증가세를 보인다. 올해 상반기 광주경찰 112신고 데이터 분석 결과, 스토킹범죄 신고는 모두 28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84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 스토킹범죄에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전자장치 부착대상자가 늘어나게 돼 관리 인력 보강 방안도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7월 기준, 광주·전남지역의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석방 포함)는 광주보호관찰소 194명, 목포지소 50명, 해남지소 27명 등 총 271명이다. 전국에선 전자감독 대상자가 4847명이었다. 하지만 이들을 관리할 인력은 고작 281명에 불과해, 직원 한 명이 17.3명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진용태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스토킹범죄 특성상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면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 대다수라는 점에서 전자발찌를 통해 위치 관리를 할 수 있어 예방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들을 충분히 관리·감독할 보호관찰 담당자 총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카약 타러갔다 실종 50대 영광 해상서 숨진 채 발견

카약을 타고 오겠다며 가족에게 알리고 신안 해수욕장을 들렀다 행적이 끊긴 50대 남성 이 숨진 채 발견됐다. 목포해경은 16일 오전 9시 10분께 영광군 안마도 녹색등대 인근 해상에서 50대 남성 A씨의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 A씨는 실종 직전 신안군 입자면 대광해수욕장을 들른 것으로 파악됐으나, 시신은 그로부터 26여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으며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지난 12일 밤 카약을 타기 위해 신안을 둘러 가족과 "잘 도착했다"는 통화까지 했으나 이후 연락이 끊겼다. A씨의 가족은 사흘 동안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15일 해경에 실종 신고를 했다. 해수욕장 인근에서는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과 카약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사고로 익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사인을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 대동고등학교 이철수 교장이 17일 광주시교육청 기자실에서 시험문답지 해킹사건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시험 문답지 빼낸 고교생 2명 퇴학 처분

교장 "관리 부실 통렬한 반성"...시교육청 감사 결과 주목

교사 노트북을 해킹하고 시험 문답지를 빼내 중간·기말고사를 치른 고교생 2명이 '퇴학' 처분을 받게됐다. 광주 대동고등학교 이철수 교장은 17일 광주시교육청 기자실에서 발표한 사과문에서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장은 "교육감을 비롯해 교육 가족 여러분께 사과를 드린다"며 "모든 교직원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며 통렬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조사 결과, 사건에 연루된 2명 외에 공모자가 없으며 다른 학생들에게 시험 정

보가 유출된 정황도 발견되지 못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 재시험을 치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동고 생활교육위원회는 최근 해당 학생 2명에 대해 퇴학을 결정했고 재심청구를 거쳐 이달 말께 징계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같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이들이 치른 2학년 1학기 1,2차 지필평가 성적을 전과목 0점 처리하기로 했다. 대동고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요 대학에 호소문도 보낼 예정이다. 대학들이 대동고 내신성적을 불신해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의 감사 결과도 주목된다. 시 교육청 정책국과 교육국, 행정국, 감사관실 등 관련 부서는 감사 인력을 꾸려 이달 초부터 대동고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다. 관련 부서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시험지와 답안지 등 학사 업무 관리, 교사들의 노트북 관리, 교내 정보 장치·잠금장치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경찰 수사결과 일부 교사는 시험지 출제 파일 등을 이동식 저장장치(USB, 외장하드 등)가 아닌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보관해 '시험 보안 관리'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부터 감사 필요성이 있어 감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감사관실에서 감사 결과를 종합해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면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박삼구 전 회장 징역 10년 선고...법정구속

금호 계열사 부당지원·횡령 등

계열사 부당 지원과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아온 박 전 회장은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3명은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대규모 기업집단은 큰 경영 주체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법적 서를 준수하고 역할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손실을 다른 계열사들에 전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주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을 인수하려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해 5월 구속기소 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 원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빌려줘 지원한 혐의 등도 있다. /연합뉴스

잇단 손가락 절단 사고...의료계 "골든타임은 24시간"

별초 등 작업 현장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손가락 접합 수술 성공을 위한 '골든타임'은 최장 24시간이라는 의료계 조언이 나왔다. 외딴 섬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절단 부위를 4~5도 온도로 유지한 상태로 전문병원을 찾으면 손씨를 발도가 있다는 것이다. 17일 광주·전남도 소방본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역에서는 일 평균 1~3건의 손가락 절단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절단 공정을 포함하는 제조업 공장, 수산·어업 현장, 가축 방역 현장, 농사일 현장 등 사고는 가리지 않고 일어난다. 특히 내달 초 추석을 앞두고는 별초 과정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의료계는 전하고 있다. 절단 사고 환자들이 주로 찾는 광주 대동병원 관계자는 "각종 산업 현장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잇따르지만 별초 시에는 평소보다 체감상 50% 가까이 환자가 늘고 있다"며 "사고가 났을 때 '속도'보다는 '보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고 발생 이후 24시간 이내에 수술을 진행하기만 하면 뼈와 신경, 혈관, 힘줄까지 정상 회복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절단 사고 직후 병원에서 수술한 경우와 사고 12시간 후에 수술한 경우를 비교하면 회복하는 데 큰 차이가 없다"며 "그보다는 절단된 손가락을 거즈에 잘 싸서 병원에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독과 지혈, 보관을 잘 해야 한다. 손가락을 얼음에 넣으면 동상에 걸릴 수 있고, 물이나 우유는 삼투압 현상을 일으켜 손가락 혈관에 손상을 일으키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회사 사정상, 매매 합니다

1. 신안동 176평, 대인동 156평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월 200만원 정도 수입중
4. 매매 - 평당 1300만원씩
일시불 조정가능

문의. 010-3605-5000